

탄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절실

거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에너지정책 재정비도 필수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해당기업의 탄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선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12월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자발적 배출권 거래 운영결과 분석> 워크숍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이성적 거래를 하기 위한 학습훈련이 필요하다”며 “거래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자가 감축비용 및 기회비용에 기반을 둔 탄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서는 “발전부문의 비대칭적 규제에 따른 감축비용 왜곡이 배출권 시장은 물론 에너지 및 산업 전체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수급계획 및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거래방식에 대한 모의실험을 계속하고 가격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는 경매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전부문 11사 등 28사가 참여해 2단계 배출권 모의거래를 4차례 실시한 결과, 총 1조4954억원(거래량 6600만tCO₂)의 현물과 91억원(40만tCO₂)의 선물 배출권이 거래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9>